

7.8조 KDDX 사업, 경쟁입찰 추진 가능성… 한화오션에 기회

(한국형 차기 구축함)

6000톤급 6척 건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1년 넘게 지연되는 중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경쟁입찰 지지

“HD현대중, 군사기밀 위반 전력
경쟁입찰 진행시 한화오션 이점”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수의계약’을 벗어나 ‘경쟁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과거부터 ‘경쟁입찰’을 주장해온 그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에 경쟁입찰이 현실화될 경우, 한화오션에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000톤급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야드.

/한화오션

오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방위산업계와 국방부 모두 향후 10년 전력증강 계획을 좌우할 중대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 선정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KDDX 사업은 통상적으로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

계 및 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로 진행된다. 현재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개념설계는 함정의 초기 설계를 그리는 단계이며, 기본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와 장비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를 원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경쟁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입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한화오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년간 활동하며 방위산업에 정통한 인물로, 과거 KDDX 사업을 비롯한 주요 방산 프로젝트에 대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지지하는 자율경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업계 관례대로라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을 가능성이 컸지만, 안 후보자의 등장으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당장 7월 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가 경쟁입찰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경우 수의계약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올해 11월까지 약 2점에 달하는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한화오션이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것을 발휘할 수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KDDX 사업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 선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월 국방부장관 선임 후 방사청장까지 정해지면 사업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악성 미분양’ 2.7만호… 12년여 만에 최대

국토부, 5월 주택통계

준공 후 미분양 전월대비 2.2% 증가
비수도권서 2만2397호 대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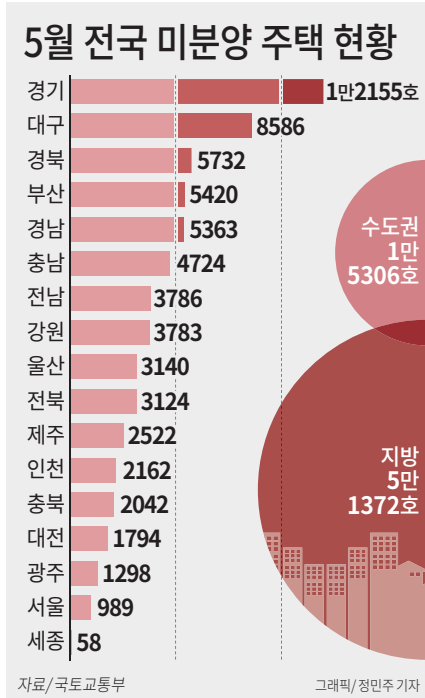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7000호를 웃돌면서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13호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비수도권 물량이 2만2397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844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3357호)과 경남(3121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78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수도권 1만5306호, 비수도권 5만1372호 등이다.

주택 공급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들



은 모두 악화됐다.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424호로 전월 대비 15.0%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인허가가 8630호로 전월 대비 39.5%

나 줄었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인허가 실적이 11만4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다.

착공은 1만5211호로 전월 대비 39.3% 감소했다. 수도권은 9157호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전국 7만42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줄었다.

준공은 2만6357호로 전월 대비 24.9% 감소했다. 누적 준공은 16만549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었다.

분양(승인)은 5월 1만1297호로 전월 대비 44.1% 급감했고, 누적으로도 5만2982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7% 줄었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2703건으로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7221건으로 전월 대비 10.1% 줄었다. 반면 전국 전월 세 거래량은 25만2615건으로 전월 대비 10.5%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5월 누적 국세수입 172조… 21조 늘어

기재부, 세수 진도율 45.1% 집계
전년 44.9%… 별다른 차이 없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세수 결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겹쳐야 할 세금 가운데 걷힌 세금의 비중인 ‘세수 진도율’이 최근 5개년 평균에 못 미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법인세수가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 14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수도 근로자수 증가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6조2000억 원 늘어난 5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 원, 관세는 4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1조 원 줄었고 환급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4000억 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5.1%로 집계됐다. 이는 30조 원 넘는 ‘세수 펀크’가 닳던

지난해 동기(44.9%)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 했다. 최근 5개년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입경정이 반영돼 세수 진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382조4000억 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낮아지면서 견힐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체 세수 누계 진도율은 본 예산 기준으로 45.1%로 5년 평균(46.2%) 대비 1.1%p 정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세입경정(372조1000억 원) 기준으로 하면 46.3%가 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SKT, 유심해킹 위약금 여부 4일 결론

귀책사유·손배 책임 법적 성격
‘위약금 면제’ 관련 핵심 쟁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오는 7월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통신 인프라인 HSS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 일정은 국회 측과 조율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 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인 ‘유심 정보 유출이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용자 측은 보안 실패도 통신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이번 사고가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의 본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용자 측은 기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의 법조인은 위약금 면제는 약관 해석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집단 분쟁 절차도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하며 총 3510명이 참여한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3266명을 대리해 신청하면서 참여 규모가 급증했으며, 나머지 2건도 서류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실회복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 및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객실회위원회, 고객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가입자 수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위약금 면제가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약 열흘 후인 5월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작업에만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인원은 총 81만6000명에 달한다.

위약금 면제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도 부담 요인이다. 면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보안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약금 면제가 선행되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통신업계 전체가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